

여의춘추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

지금 국회 앞을 지나면 의사당 열주 사이에 커다란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경축 19대 국회 개원'. 새로운 선량 300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7선의 재발 정몽준 의원부터 31세 앳된 김재연 의원까지 상기된 표정으로 붉은 색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르내린다. 지역구 출신이든, 비례대표든 이들의 보무는 담당하다. 선거철 지하철 입구에서 굽실거리던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다. 유권자라고 대중 대했다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이들에게는 수많은 특권이 주어진다. 다 열거하면 200가지에 이르고,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하면 24개쯤 된다. 그렇다고 모두 나쁘다고 시비 걸 생각은 없다.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것이 문제점이긴 해도 애초에 나쁜 권력과 싸우려면 그 정도의 방탄조끼는 돌려야 한다. 이등 중에 일을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많이 하니가 운전기사 딸린 세단을 타도 좋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사우나나 헬스 좀 공짜로 하면 어떤가. 1년에 두 번쯤 해외에 나가서 전문을 낚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28년차 직업인으로서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일의 신성성'이다. 한마디로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직업의식의 첫 번째 조건은 국

민 세금에 대한 태도다. 지난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내 본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 가슴을 쓸어내린다. 혼신의 힘으로 번 돈이 세금으로 몽톡 잘려나가는 경험은 제 몸의 살점을 때어내는 것처럼 아프다. 액수의 다과를 넘어 세금은 납세자의 땀과 피가 모인 것이다. 월세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필수적이지만 국회 개원을 못하고 싸움질만 하는 의원들을 뒷바라지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다음으로는 '밥의 거룩함'이다. 의원들에게 파격적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 지대사를 다루기 때문이다. 의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1억5000만원의 28년차 직장인도 받을 수 없는 연봉이다. 의원들은 여기에다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1명씩, 인턴 2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5평 사무실에 9명 직원을 붙여주면 자그만 기업 하나 차리는 것과 같다. 이렇고도 일을 안 하면 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 알잡는가, 민간에서는 철저히 '노 워크, 노 페이'라는 사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염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직 국회의원이 65세만 되면 자동적으로 매월 120만원 받는다는 것은 정말 뻔뻔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 때도 비난 여론이 빗발쳤으나 눈 딱 감고 통과시킨 그들이었다. 120만원이 뭐 별거냐고? 국민연금이 생길 때부터 28년간 다달이 회사와 반반씩 부



손수호
논설위원

은 직장인도 61세가 되어 120만원쯤 나온다고 한다. 그것도 앞으로 얼마나 줄어든지, 수령 연령이 얼마나 늦춰질지 조마조마하다. 군인이나 공무원, 교사도 기본적으로 낸 만큼 받는다. 국민들

염치 있다면 특권 내려놓아야

의 사정이 이렇진대 자기들은 한 푼 붓지 않고 연금을 받겠다는 것은 도둑 심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탐욕은 정쟁이 나 있고, 한번 권력의 맛을 본 민주당은 정권 탈환에만 눈이 밝게 있다. 이럴 때 진보당이 의원들의 어깨에 덕지덕지 붙은 견장을 내려놓는데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 진보라는 것이 본래 기득권의 벽을 깨며 합리와 이성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상한 외계인 행세를 하니 실망스럽다. 그러나 19대 국회도 4년 내내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 그들의 리그를 펼쳐갈 것 같다. 유권자를 한강에 떠다니는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여기면서,

namu@kmb.co.kr

기고

올 여름 전기는 문제없나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어 작년이 겪은 정전 사태가 미리부터 걱정이 된다. 지난해 9월 15일 발생한 순환정전은 전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지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전이 가져올 재앙은 상상하기조차 싫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경제활동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수족관의 물고기는 때죽음을 면치 못하고, 공장 기계는 가동이 멈춰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마치 영화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침략한 후에 나타나는 한 장면처럼 섬뜩하지만 실제로 정전이 발생하면 나타날 재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따름이다.

2011년 기준 전기의 원가보상률은 약 87%로 100원에 물건을 만들어 87원에 파는 꼴이다. 일반 전자 값이면 망해도 별사 많았다. 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차입금의 하루 이자비용이 무려 60억원이다. 달러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배당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산업용, 가정용 모두 최저 수준

이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의 가계나 산업은 전기를 아끼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제는 "돈을 물 쓰듯 쓴다"는 표현 대신 "돈을 전기 쓰듯 쓴다"는 표현이 더 현실적으로 들린다.

지난해 9월 순환정전 발생 후 각 언론은 전력수급 비상상황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정전을 호소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 다음날 최대전력은 전년의 기록을 경신하지 않았던가? 정전이 생활 화되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일본은 대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 0' 선언 이후 전년대비 15% 정전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놀랍게도 실적은 21%로 6% 포인트나 초과 달성하였고, 노인들의 정전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여 오히려 방송에서 에어컨 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분명히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리라고 확신한다. 앞에서 예시한 으스스한 정전국의 피해를 줄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편



박완규
중앙대 교수
경제학부

익이 될 것이다. 게다가 전력사용에 있어서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편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올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정전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정전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된 국민의식이다. 내가 조금 아끼면 나라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전이나 발전사 등 공급자들은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수요관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개발을 통해 정전사태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에도 진력해야 한다.

사설

끝없는 중국의 영토 야욕과 역사 왜곡

영토적 야욕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대산이다. 이번엔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늘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베이징에서 멀지 않은 허베이성 산해관(山海關)이라는 게 정설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 라오닝성의 고구려 성인 박작성을 만리장성에 포함시키더니 이전 더 나아가 고구려와 발해의 근거지였던 지린성과 헤이룽강성에서 발견된 성의 유적들도 만리장성에 포함시켰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진·한시대부터 여러 왕조를 거쳐 축조된 만리장성은 원래 한족(漢族)이 흉노·몽고·거란·여진 등 이른바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는 중국 사서에도 솔하게 나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史實)이다. 그런데 그것이 북방민족의 주 활동무대이자 고구려 발해의 근거지이기도 했던 곳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족 입장에서 성의 실정부에 적을 막기 위한 성을 쌓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중국이 이처럼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자국 영

토 안에 있는 성은 모두 만리장성'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딱 데 있지 않다. 현실의 영토적 야욕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 등에 따른 동북아 정치지형 변화와 차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영토분쟁에 미리 대비하고 기존의 실질적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중국의 역사학이 사실을 확인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이런 주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주변 소수 민족 역사의 블랙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역사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국의 소아병적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자성만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정부와 학계의 철저한 대응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대남 분탕질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적극 맞대응해야 한다. 중국 원조에 기대고 있는 행편을 모르지 않지만 말꼬마다 뉘끼라는 '민족' 타령이 부끄럽지 않은가.

성 문란 부추길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사후 긴급피임제를 전문 약사에서 일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사 처방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임의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의 계획은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과 그에 따른 낙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사후피임약이 약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 유력한 피임법이라는 환상을 심어줘 오히려 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후피임약의 피임 실패율이 15% 수준으로 상당히 높는데, 피임 효과를 과신해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할 경우 낙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후피임약을 2001년 일반약으로 전환한 스웨덴의 경우 6년 만에 낙태율이 17% 증가했다. 콘돔 사용이 줄면서 성병 등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종교계에서는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사후피임약이 생명윤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사후피임약 구입이 순쉬워지면서

그리잖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륜이나 청소년의 성 문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건당국은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청소년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약국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청소년만 살 수 없도록 막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결국 성적 이탈을 견제하던 임신 공포만 감쇄시키게 된다.

부작용 논란도 남아 있다. 보건당국은 임상시험 등을 검토한 결과 사후피임약에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긴급 피임약은 일반약에 비해 호르몬 함량이 10~15배나 높아 적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주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당국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사후피임약 판매 문제는 신체 부작용뿐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까지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삼불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역효과를 미리 면밀하게 따져보는 보수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석기·김재연 설 땅이 있겠는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비례대표를 사퇴하라는 당명과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장 당기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주 내에 중앙당기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기각되면 제명이 확정된다. 통합당이 사실상 두 사람을 버린 것이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계엄하의 군사재판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뒤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제명 처분은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듯한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종북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최대한 시간을 끌며 보려는 의도도 보인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을 향해 이의신청을 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

퇴할 것을 권고한 데에도 이런 우려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계속 모습을 보이는 한 종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해 진보진영 전체의 상처도 덧붙 것이다. 그리고 강 위원장 말마따나 연말 대선에서 '후회와 통탄'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통합당은 물론 상당수 국민들도 이미 두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거나, 본인들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 다수다. 이들이 과거에 다닌 한국 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조차 "선배라는 사람들이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니 참 부끄럽다"고 비난하는 상황이다. 금메달을 달고 있어도 사면초가에 빠져 '식물 국회의원' 처지를 면치 어려울 것이라 얘기다. 의원직 고수가 본인들에게도, 진보진영에도 해(害)만 될 것이라 점을 어떻게 그들은 모르고 있을까. 안타깝고 짜증난다.

“박찬호는 건강을 어떻게 관리 하고 있을까?”

신용의 상징·농식품 유한양행 www.yuhan.co.kr

국민투수는 국민영양제! Vitamin B · C Complex

베콤씨 1일 2회 아침·저녁

미네랄과 코엔자임 Q10을 더한 **베콤씨 이브**

어려운 건강관리, 하루 두 알 베콤씨로 쉽게!
건강 관리하기 힘드시죠? 몸에 필요한 비타민 B와 C가 충분히 들어있는 베콤씨로 쉽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 베콤씨! 몸이 건강해지니까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타루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본드서 의약품상표이고 '가용성'은 주위사람을 잘 믿을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유한양행 소비자상담실 080-024-1188 (수신자 요금부담) 광고심의필 : 1154-2701